

“파면” vs “복귀”...안국역탄핵 찬반 밤샘집회

경찰, 선고기일 지정 후 현재 100m 진공 상태화 착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까지 이를 남은 가운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일대에서 탄핵을 찬성·반대를 촉구하던 지지자들이 서울지하철 3호선 안국역에서 ‘철야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탄핵 찬성·반대 집회 참가자들은 2일 오전 서울지하철 3호선 안국역 일대에서 철야 집회를 벌이고 있다. 당초 현재 인근에서 1인 시위, 단식 농성을 하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으나 전날 선고기일 지정 후 경찰이 현재 인근 100m를 ‘진공 상태’를 만든 데 따른 것이다.

이에 탄핵 찬성 지지자들은 안국역 1·6번 출구에서, 탄핵 반대를 촉구하는 이들은 안국역 5번 출구에서 할

동 중이다.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안국역 6번 출구 앞에서 전날 오후 9시부터 탄핵 촉구 밤샘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전 8시30분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 1000명의 참가자들은 안국역 1번 출구 앞에서 약 280m에 달하는 7차선 도로를 차지한 채 ‘현재는 파면 선고’ ‘윤석열 즉각 파면’ 손팻말을 들고 “민주파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전쟁책임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전날부터 철야 집회를 이어온 이들은 은박 담요를 덮은 이른바 ‘키세스’ 모습으로 추위를 버텨내거나 깔개·은박 돗자리 위에 가방을 베개

삼아 누워있기도 했다. 호두과자나 젤리 등 간식을 서로 나누거나 침낭을 편 채 잠을 청하는 이들도 눈에 띄었다.

진주에서 온 대학생 윤혁(21)씨는 “대학 동기 10명과 같이 왔다”며 “침낭과 깔개를 들고 왔는데 선고기일까지 철야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면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 세상에 다짐하는 신호탄이 될 거라고 생각해 목청껏 외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안국역 5번 출구 부근에선 탄핵 반대를 촉구하는 지지자들이 집결한 상황이다. 유튜브 등 약 100명의 집회 참가자들은 ‘탄핵 각하’ ‘사기 탄핵’ 등이 적힌 팻말을 든 채 ‘탄핵 기

각’ “대통령 즉각 복귀”를 외치고 있었다.

이곳에서 밤샘 집회를 해왔다는 이모(61)씨는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자는 마음으로 왔다”며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내리면서 계몽한 것을 대통령 덕분에 알게 됐다”고 했다. 이씨는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해서 나라를 똑바로 세워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경찰은 탄핵선고 당일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치안이 안정될 때까지 전국에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할 방침이다.

특히 서울에는 210개 부대(1만 4000여명)의 기동대를 집중 배치해 현재 주변을 진공 상태로 유지하고 탄핵 찬반 단체 간 사전 차단선을 구축해 마찰을 방지할 계획이다.

/뉴시스



밤새 이어진 윤 대통령 파면 집회

2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24시간 철야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상법 개정안 ‘직’ 걸었던 이복현 사의표명

“대통령 있었다면 상법개정 거부권 행사 안했을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통령이 계셨으면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리라 확신한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보수 정부고 시자아에서의 공정한 경쟁은 보수의 핵심적 가치라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전날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사의를 표했다고 털어놨다.

이 원장은 전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총리께서는 정당한 거부권 행사를 하신 거고 헌법 질서 존중 차원에서는 그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데도 동의하고 금융위원장과 이견이 전혀 없

다”고 말했다.

다만 “작년 하반기까지만 해도 만에 하나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기 힘들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기도 했고 저희도 같은 생각이었다”며 “주주 보호 원칙을 우리가 이미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다른 모양이 통과된다 해도 그걸 어떻게 거부권까지 행사하는게 기존에 저희 생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간 이 원장은 “직을 걸고라도 막겠다”며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강하게 반대해왔다.

이어 야당도 상법 개정안을 똑같은 내용으로 통과시키기보다 정부의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절충해 마련해 주길 촉구했다.

그는 “상법을 지금처럼 통과시키

게 되면 100만개 정도 비상장법인이 다 적용 범위가 된다. 예를 들어 대형 상장법인에 우선해서 해보는 식으로 구조조 상법에 마련하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금의 개정안으로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법, 자본시장법 개정은 지금 추진이 안되면 (안된다). 민주당도, 재계도, 여당도 조금씩 양보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간곡히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내에서 논의된 것들이 밖으로 불거져 안타깝고, 금융위원장님이나 부총리께도 죄송한 마음이다. 금융위 설치법상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제청권자가 금융위원장이고 제가 최근에 위원장께 연락을 드려 제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심 총장의 딸은 외교부 채용에 응시하면서 자신의 경력을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연구 보조원’이라고 써냈지만 당시 심씨의 직책은 ‘석사 연구생’ 즉 조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는 전날 야당이 제기한 의혹을 규명해달라며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외교부를 향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를 의뢰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검찰총장 딸의 특혜 채용 비리 의혹에 한달 감사 청구가 된 말이냐”라며 “외교부도 감사원 감사로 물타기 할 생각 말고 당장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하라”고 강조했다.

탄핵심판 결론은 나왔다…결정문 손질중

선고 앞두고 결정문 문구 검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정하고 결론을 내린 가운데 평의를 열어 최종 결정문을 다듬는 후속 작업에 집중할 예정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는 전날 오전 재판관 평의를 거친 후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현재는 전날 평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인용·기각·각하 의견을 밝히는 평결을 진행해 큰 틀에서 결론에 대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평의의 결론을 내기 위해 재판관들이 쟁점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표결하는 과정이다. 통상 모든 평의가 이뤄진 뒤 최종적으로 표결하는 평결을 하게 된다.

결론 도출을 마친 만큼 현재는 선

고까지 결정문을 다듬을 것으로 보인다. 결정문에 들어갈 문구를 조율하고 재판관들의 별개·보충의견 등을 기재할지 여부에 관해 조율하는 절차가 남았다.

헌법연구관 TF는 변론 종결 이후 인용·기각·각하 등 다양한 경우를 놓고 결정문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재판관들은 이 결정문 초안을 놓고 수정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선고일을 앞둔 2일과 3일에도 평의를 열고 결정문을 다듬는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일 당일에도 평의가 열릴 수 있는데 결정문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수순에서 열릴 수 있다.

현재가 결론을 내렸더라도 재판관 평결은 선고일 당일까지 이어질 수 있다.

/뉴시스

“쐬, 탄핵 확산… 4월 4일 사(巳)시 선고

박지원 “죽을 사” 자가 3개 들어있어 틀림없이 죽는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간 신앙을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확신했다.

1일 박지원 의원은 YTN 라디오 ‘신윤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오는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을 두고 어떤 판단을 내릴지를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8대0, 인용으로 본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4월4일 오전 11시가 아니라 ‘오전 11시는 ‘사시’”라고 했다. 이어 “4·4·4 ‘죽을 사’자가 3개나 들어가 있어 틀림없이 죽는다”고 말했다.

이어 “명명백백한 내란 쿠데타인데 과연 기각 혹은 각하 의견을 낼 헌법재판관이 있을까”라며 “만약 그런 의견을 내는 헌법재판관은 역사적 죄인이자 제 2의 이완용으로 자자순순이 대한민국에선 못 산다”고 주장했다.

그는 8대0 인용이면 교착 상태가 아니었느냐는 물음에 “(헌법재판관들이) 일찍 심리를 끝내놓고 계속 평의한 것은 국민이 분분하니까 여러 가지를 봤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가감 없이 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향해서 민심을 전달했다. ‘이게 왜 이러냐. 당선들이, 헌법재판관 여덟 분이 나라를 망치느냐?’ 이런 얘기가 전달되니까 선고일이 4일로 딱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파면’이 나올 때까지는 긴장하고 국민 여론을 일으켜야 한다”고도 했다.

이날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파면돼 조기 대선이 이뤄진다면 민주당 대선 후보는 누가 필지에 대한 질문에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는 건 확실하다”고 단언했다.

/김도기 기자

이재명, 선고 앞두고 언행 자제령

“현재 자극 말아야”…박홍근 “탄핵 기각시 불복 운동” 주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언행 자제령’을 내렸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 재판관들을 당에서 자극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홍근 의원은 전날 윤 대통령 탄핵 기각·각하 선고가 나올 경우 현재 결과에 ‘불복 운동’을 하자고 주장해 비판을 자초했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 재판관 구성의 위헌 상황을 해소하지 않아서 윤석열 탄핵이 기각된다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사회 단체가 공식 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복 논란에도 박 의원은 이날 입장에서 “모든 경우의 수를 우선 따져봐야 하므로 어찌 올린 저의 입장은 지금도 확고하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野 주도 채택

與 대부분 표결 직전 퇴장…野 주도로 통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이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그 결과 결의안은 찬성 184표, 반대 2표로 가결됐다.

국민회의 의원들은 해당 안건 상정 직전 본회의장을 대부분 빠져나갔고 여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박형수 의원과 최은석 의원만 남아 반대 표를 던졌다.

표결 전 찬반 토론 과정에서는 한 차례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단에서 발언하는 도중 박충권 국민회의 의원이 자리에서 ‘공산주의

자’라고 외쳤는데, 민주당이 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면서다. 또한 공산주의자 발언이 강 의원을 향한 것인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향한 것인지에 대한 해명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사과와 해명을 거부하면서 퇴장했고 야당 의석에서는 고성이 터져 나왔다. 곧 이학영 국회의원장은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불러 중재에 나섰다. 이후 찬반토론은 종료됐고, 원내수석부대표가 의사전행발언을 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마 후보자에 대한 발언이지, 그게 강 의원에 대한 발언일 수가 있겠다. 박 의원에게 직접 확인한 부분”이라고 말했다.